

## 우리 외교안보 상황은 총체적 위기인가?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악화된 남북한 정세와 미국, 중국과의 3각 외교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 현 국내 시사 문제에 대해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의 특별 투고를 게재합니다. 본 원고는 지난 2월23일자 조선일보의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9편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보느냐'는 주제의 필자 인터뷰용 자료로서, 지면상 주요 사안에 대해 집약하여 재정리 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 현재 안보 상황은 총체적 위기? - 20여년을 허송, 이제 '더할 수 없는 위기'

한동안은 그랬다. 외교, 통일, 국방 모두가 불안했으니까. 북한의 핵미사일과 각종 도발역량은 급속히 커져 가는데 우리 대비태세는 미흡하기 짝이 없고 외교는 우리 당국자가 미중 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다고 희희낙락 했지만, 건강한 외교의 출발점은 '상호존중'인데 북한 핵미사일은 버려두고 우리 '사드'만 문제 삼아 '중국의 공격목표' 운운하는 것은 '존중'보다는 경멸에 가깝고, 동맹의 基底는 '신뢰와 우의'인데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미국의 내심에는 그런 중국에 전전공공하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릇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회를 버려두면 위기로 되돌아오는 법인데, 1990년대 중반 6.25 이후 반세기만에 찾아온 그 운명적 기회를, 우리가

미루고 회피하고 때로는 '햇볕 햇볕' 하면서 북한을 도와 주기까지 하면서 무려 20여년을 허송하다가 이제 '더할 수 없는 위기'로 되돌려 받고 있는 셈이 아닌가? '이러다가 자유통일은커녕 우리가 미래를 잃지 않을까' 겁이 다 났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라고 우려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보면서 걱정을 좀 덜었다. 어떤 위기도 그것을 직시 할 수 있으면 이미 극복 할 수 없는 위기는 아닌 법이다. 무려 20여년을 허송했으니 晚時之歎은 없지 않지만 우리 지도자가 이제라도 북한 체제의 실체를, 그리고 오늘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다행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한반도의 미래가 아직은 우리의 비전과 의지에 달려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잘만 대처한다면 아직은 기회의 시대인 것이다.

###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위협? - 핵실험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의 성격상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라는 것 아닌가? 만약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면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국은 줄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나? 항복이나?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赤化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평화가 가능하다 해도 從屬的, 奴隸的 평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보니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오늘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외에는 항구적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 북한도 그래서 만들었다는 것을 굳

이 숨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이미 선전포고 까지 한 셈이다. 그것도 4번씩이나. 특히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태’는 북한에 저런 체제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핵미사일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이고, 따라서 우리가 서둘러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警告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애써 무시해서 그렇지 이것이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자유통일을 서두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목표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의 원칙’인데 핵미사일 폐기 보다는 자유통일에 우리 안보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외교 국방 등 나라의 전체 안보역량을 결집해서 지금처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 및 지연시키는 것도 일단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드든 뭐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 및 방어태세’도 확립하고, 그 위에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대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2007년 전(前)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Richard Armitage)의 2차 보고서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자유통일 외에는 궁극적 해결의 길이 없다’고 지적했듯이 이런 시각은 진작부터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해온 인식이다. 아니 핵폐기도 못하면서 무슨 통일? 싶겠지만 세계적 전문가들마다 ‘핵 폐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일은 곧 된다.’고들 하지 않던가? 특히 이번 북한 핵·미사일 도발 사태는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은 체제는 핵미사일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만큼 이성적이지도 않고, 잔혹하기만 할뿐 더 없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모르는 나라가 거의 없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들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인류 역사에 오늘 북한 같이 저렇게 극한적인 공포통치가 오래 간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20일 미국 CSIS의 한 보고서에서도 ‘북한 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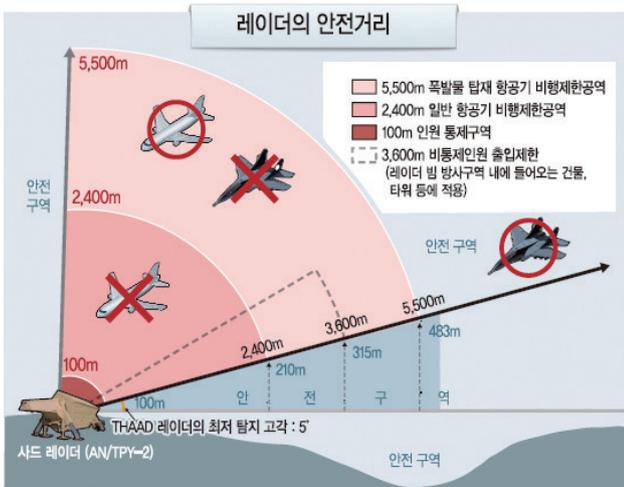


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남북통일은 시기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흔히 한국의 의지와 용기를 문제 삼는다. 작년 10월 존스홉킨스대학 M. 만델바움교수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한국 대통령도 붕괴한 북한을 책임지겠다는 열정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수단도 넘쳐 날 텐데 말이다.

### 중국이 반발하는 사드 배치? - 핵미사일에는 ‘사드’가 가장 용이, 효율적 수단

그것을 중국이 반대한다고 망서릴 수는 없다. 북한 핵미사일은 중국에게는 단순히 좀 골치 아픈 국제 안보이슈의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에게서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각일각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대비태세를 서둘러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대비태세가 완벽하면 북한의 도발의지도 그만큼 더 억제 될 것이다. 이른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효과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는데 현재로서는 ‘사드’가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 수단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주변국의 입장도 합리적이고 타당 한 것이라면 고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드의 경우 그 미사일은 물론 유효 탐지거리 대략 600km 정도인 레이더도 중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국이 말하는 위협이란 의구심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무기 아닌가? 중국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설사 다소 위협이 된다고 해도 그렇지 도대체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되니 안 되니' 말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6자회담 의장국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은 내버려두고 어떻게 우리 방패만 문제 삼아 맨가슴으로 있으라고 할 수 있나?

더욱이 중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만 할 뿐 도대체 사드를 배치하면 왜 안 되는지 명백하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중국이 사드 논란을 빌미로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추정이다. 또 중국이 아직도 확고히 조중동맹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 심각한 주장도 있다. 왕용(王勇) 베이징대 교수가 한국이 중국의 '안전 공간'이라고 표현했듯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팽창주의적 야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에 부응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에 다름 아닐 수가 있다.

그런데 실은 중국도 똑 부러지게 명확히 말하면 듣는 나

라다. 원래 외교라는 것이 무조건 잘해 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대의 존중은 받아야 대화가 되고 소위 외교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특히 상대의 경멸을 사는 일은 禁 阻 中 의 금기다. 차제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 해주려다가 중국을 저리 傲 慢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반성해 봐야 할 듯하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대북 정책기조?**  
- 불합리하던 것들을 박대통령의 결단으로 겨우 바로 잡은 셈

개성공단 중단은 어차피 불가피한 조치다. 事 必 歸 正 인 것이다. 적화통일을 위해 6.25남침을 감행한데 이어 온갖 도발을 반복하고 핵미사일까지 만들어 온 북한이 아니던가? 아무리 속이 없어도 그렇지 그 이빨아래 터를 잡은 것부터가 비이성적인데 저들의 핵 만들기까지 돕는 짓이 어떻게 합리적이겠는가? 순기능도 없지 않지만 이것이 개성공단의 본질적 한계다. 처음부터 이렇게 불합리하던 것들을 박대통령의 결단으로 겨우 바로 잡은 셈이다.

일부에서는 그 때문에 갑자기 평화가 깨지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진다고 겁을 준다. 그러나 그동안이라고 평화로웠던가? 우선 햇볕정책 속에서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대신 다 허물어져가던 북한 김정일 체제가 되살아나 핵미사일까지 만들었다. 개성공단까지 열어도 연평해전 등 온갖 도발과 핵개발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에 戰 戰 兢 兢 하게 되었는데 무얼 더 망설이겠는가?

물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이 여기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고 긴장은 일시 좀 더 높아질지 모른다. 하지만 없었던 위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 뒤에서 급속하게 커가던 위협이 제 모습을 드러 낸 것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통령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핵미사일을 비롯해서 오늘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그 뿐이다. 세계적 전문가들마다 공감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 孫 子 에 '以 正 合 以 奇 勝' 이

라는 말이 있는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지혜로운 통일전략을 수행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의지가 문제일 뿐 그 방법과 수단도 지극히 다양하다.

**최근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처?  
- ‘북합도발’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잘 알다시피 북한은 아웅산 폭파 KAL기 폭파 등 국가에서 테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국가테러리즘’국가다. 그러니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 시점 특히 우려 되는 것이 북한의 ‘북합도발’가능성이다. 김정은은 작년 6월 정찰총국을 방문해 요인 암살과 테러를 전담하는 특수공작과를 신설하고 연료난 때문에 일반 군사훈련은 제한하면서도 특수부대 훈련은 전에 없이 강화 했다는 것 아닌가? 어쩌면 이번 전선 대북방송도 북한의 이런 도발을 재촉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최근 김정은이 각종 대남도발의 주역이었던 정찰 총국장 김영철을 통일전선부장으로 발탁 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한 북한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려 들 것이고 그럴 경우 김영철이라면 ‘지뢰나 포격’ 같이 우리의 즉각적 반격을 유발하게 될 방식보다는 가급적 보복을 회피하고 발뺌 할 수 있는 방식, 그러면서도 잘만하면 결정적 勝機를 기대 할 수도 있는 이런 작전을 선호 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북합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급히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북한 ‘북합도발’에 대비하려면 미국 국토안보부(DHS) 체제처럼 包括安保態勢를 갖추어야 한다. 사실 천안함 연평도사태 같은 거야 군에서만 잘 대처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군대만으로는 안 된다. 군대는 물론 국정원, 경찰, 행정부서등 나라의 역량을 결집 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조기경보 체제나 국민행동 요령 같은 사회적 대비태세도 잘 정비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만 보완 했으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비상기획위원회를 없애 그 싹부터 자르더니, 현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면서도 여기서 멀리 비켜가고 말았으니 아쉬운 일이다.

**맞는 말 : ‘자유통일을 이루려면 지도자의 전략적 안목과 그리고 온 국민의 일치된 의지와 용기다’**

전쟁을 하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자유통일을 이루어 내려면 지도자의 전략적 안목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일치된 의지와 용기다. 평화는 본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피하고 도망하면 뒤따라와 뒷덜미를 물어뜯는 것이 전쟁이요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정면으로 맞서야 지켜지는 것이 평화인 것이다. 결국 지금은 싫든 좋든 온 국민이 일치된 의지와 용기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해야 할 때다.

**필자 약력**

육군중장(예) 정치학 박사  
육사 교수, 성균관대학, 명지대학 초빙교수  
청와대 국방비서관, 국방보좌관, 군단장, 국방대학교 총장  
미국 RAND, 일본 NIDS, 러시아 IMEMO, 중국 CASS 연구원/초빙교수  
미국 RFA 논설고문, 조선, 동아, 문화 등 주요 일간지 객원 논설위원  
中東戰爭, 21세기 韓國安保 등 著書 및 연구논문 다수